

나를 춤추게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전일광장

정상연

전남과학대 겸임교수
문화학박사

다들 ‘나라가 바뀌었다.’ 고들 한다. 하지만 달리 표현하자면 나라가 바뀐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뀐 것이다.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 주위가 환해지고 있다. 나라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비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모습에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한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치·사회를 비롯한 문화예술 전반에까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묻어나고 있고 감성적으로도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다른 이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요즘 매일 노래하고 싶다. 춤도 추고 싶다. 그리고 내일이 또 기다려진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며칠만 있으면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지금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부양(浮揚) 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일 것이다.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두 의견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성에 발로인 것이다. 전자는 어려운 서민 경제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효과

를, 후자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과 일회성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주위를 살펴보면 “잘살고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호소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듯하다. 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고, 소비물이 인상과 소득의 감소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진 탓도 있을 것이다.

특히 예술인들의 삶은 더욱 숨 가쁘다. 탄핵 여파로부터 시작해 계속되는 악재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은 물론이고 그들의 결과물에 대한 소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예술인들은 개별적 창작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끔은 작품을 기반으로 한 한시적인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빈번히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국가나 관계 기관의 지원 금액도 제한적이거나 대상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허다하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정부가 추진하는 신속한 민생 지원은 문화예술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살아가는 것은 절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기근(飢饉)이나 재해(災害)로 인한 백

성들의 삶이 곤고(困苦)해지면 왕들은 곳간 문을 열어 민심을 달랠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제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300년 동안 부를 유지했던 경주 최부자 집도 흉년이 들면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도덕적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보였고 대선 후보 당시 문화예술 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며칠 전에는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문화예술인들의 문화 활동은 우리 전체 삶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공적 기능이기에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인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방안을 도입해보자.”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금의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보이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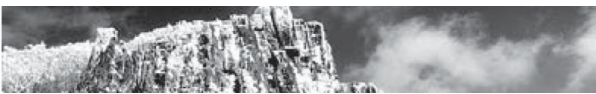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남는다. 이러한 관점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숫자로 드러난 K-콘텐츠, 팝 등과 같은 문화산업 분야에만 집중이 되면서 순수 예술 분야에는 그림자가 생길 수 있음을 걱정하는 것이다.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이 있다.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문화강국의 기본은 기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순수 예술 분야에도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기를 희망해 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미국 텍사스주 중부 지역을 덮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캠프 미스틱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여행가방이 7일(현지시간) 바깥에 꺼내져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석대



최근 뉴스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네 글자가 있다. ‘법불아귀(法不阿貴)’. 권세 있는 자에게 법이 굽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고대 중국 전국시대, 법가 사상이 한비자의 저서 ‘한비자’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휘지 않는다(法不阿貴 繩不撓曲·법불아귀 승불요곡).” 법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칙적인 말이다.

‘법불아귀’는 요즘 다시금 목직한의 미로 불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 사실은 특수공무 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66쪽 분량에 이른다. 혐의 중 ‘내란 우두머리’는 유죄 시 사형이나 무기형 외에는 없다. 대통령의 사면 없이 풀려날 수 없는, 법률상 가장 무거운 범죄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조사 출석을 수차례 미뤘고, 결국 특검팀의 두번째 소환에 응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피의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밝히며 ‘법불아귀’란 말을 꺼냈다. 그 표현은 단숨에 사회적 울림을 일

법불아귀, 그 이름의 무게

으켰다.

법은 이름 없는 이들에게만 날카로워서는 안 된다. 가진 자, 권력자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는 신뢰를 얻고, 정의는 실현된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말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만큼 법이 권력 앞에서 예외를 만들어왔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는 뜻이다.

정의는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행동으로, 판결로, 책임으로 증명된다. 국민은 그 ‘법불아귀’라는 네 글자가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지금은 그 원칙이 진짜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 민주주의란, 권력을 감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 두려는 시민들의 약속 위에 존재한다. 그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 법은 칼이 아닌 방패를 잃는다. 법이 정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은 결국 그 법을 믿지 않게 된다.

이 네 글자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권력 앞에서 다시 외쳐져야 한다. ‘법불아귀’는 고사성어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비추는 시험지다.

최동환 논설위원

社說

취약지역 개조, 지방소멸 막는 계기되길

전남서 농어촌형 등 20곳 선정

전라남도에서 농어촌형 19개 마을과 도시형 1곳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국민소득과 교육 규모 등 국가 경제력은 크게 성장했지만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은 여전히 참담한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72개 마을이 신청해 102곳이 선정됐다. 사업은 2026년부터 추진되며 마을당 평균 농·어촌형 23억원, 도시형 4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노후 주택이나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을 지원해 지역민과 관광객 등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 노인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는 전남에서 그동안 199개 마을이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와 농축산식품부 등이 발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을 보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고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광양 무선마을의 경우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던 마을 안길을 확장하고 포장공사를 완료해 주민 안전과 편의 등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 2016년 지정된 여수 충무동 충무마을과 목포 동명동 등도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각종 인프라가 개선돼 정주여건이 마련되면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주민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 주민건강교실과 마을학교 등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그동안 소외된 지역민에게는 희망이다. 이번 선정이 전남 농·어촌을 개조시켜 지방 소멸을 막는 공간으로 재탄생 되길 기대한다. 사업대상도 더욱 늘어야 한다.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삶의 질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폭염 속 예비군 훈련, 국민 공감 못 얻는다

안전 고려, 유연한 운영 필요해

짙둥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군 동원훈련이 진행되면서 대상자들의 불만이 높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예비군들에게 야와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훈련 대상자 다수가 20대 청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계절학기, 자격증 시험 준비, 취업 준비 등 중요한 일정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부담인데, 폭염까지 더해지니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다. 더구나 예비군 훈련은 1~2주 전에도 소집 통지가 가능한 구조여서 여름철 여행이나 개인 일정에도 큰 차질을 준다. 훈련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광주 지역의 훈련 장소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배치된 사례처럼, 이동에만 몇 시간을 들여야 하는 상황은 청년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실

내 중심의 교육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도 뒤따른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폭염 경보 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기후환경을 감안하면, 훈련계획 전반에 걸쳐 기상 리스크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훈련 불참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방의무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러한 강제성은 유연한 훈련 운영체계가 전제될 때에만 정당성을 갖는다. 날씨와 건강 상태, 생업 여건 등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소집은 오히려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려면,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부와 병무당국은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정말 필요한 건 현실에 맞는 제도 운용이다. 기상 상황에 따라 훈련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열사병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실내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예비군 훈련은 국가 안보에 기여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정기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